도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희비'

전북개발공사 등 4개소 '가 등급'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라 등급'

성과급 · 기관장 내년 연봉 등 차등 지급… 부진기관 경영개선 중점

전북도는 28일 '전라북도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2016년도 실적)를 심의확정하고, 2018년 평가지표를 결정했다.

심의결과 가등급 4개소, 나등급 6개소, 다등급 4개소, 라등급 1개소로 결정됐다.

'가' 등급으로는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나' 등급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다' 등급은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라' 등급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결정됐다.

전북도는 기관 성격 및 사업특성이 상이하므로 평가점수를 단순비교를 지양하고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기로 했다.

전북도에서는 경영평가결과를 기관 성과급 및 내년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고 평가부진기관은 기관장 인사 불이익 조치,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을 실시하여 경영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120%~0%, 기관 성과급 규모는 130~70%로 차등 지급되며 기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된다. 특히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기관장 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권장 인건비 인상률의 2배에서 △2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이 삭감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기관장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보고토록 했다.

전북도는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기관들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며,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사업변화를 지표에 반영했고, 단순 사업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기관별 여건 및 사업 난이도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아시아 농생명 산업수도 도약 경주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실현 스마트 밸리 조성 TF 운영

전북도는 28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지역공약 실행을 위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TF'를 구성하고 본격적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5개분과, 38명으로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인근 이전기관(농촌진흥청, 농업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여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TF는 문재인 정부 임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규모 전략사업을 구체화하고 후속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자 혁신도시 확장 및 클러스터간 연계 방안 마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인의 수혜를 최대한 높이는 실천적 세부사항이 논의하게 됐다.

식품분과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확장 방안, 수출지향형 농식품 육성 방안, 전처리 및 공동가공 활용방안, 실천적 R&D 상용화 방안 등 실천적 세부사업 마련했다.

종자분과는 민간육종단지 확장 방안,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방안, 실천적 R&D 상용화 방안 등 실천적 세부사업이다.

ICT, 농기계분과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운영 및 농가보급형 농기계 개발 등이다.

미생물 분과는 기능성 미생물, 바이오 산업화 구축 방안, 동물 의약품 상용화 방안 및 실천적 R&D 개발 등 실천적 세부사업 마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TF 운영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추진 논리개발을 위한 관련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것이며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道 기능인 전국대회 출사표

내달 4일~11일 제주서 전북 대표선수 114명 열전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참가신고식이 28일 도청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 양성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정대주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박현진 선수(CNC/선반), 진원 선수(가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참가신고식이 2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성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정대주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선수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자동차 차체수리 등 37개 직종에 114명의 선수가 종합성적 8위권 진입을 목표로 출전한다.

지난 4월 전라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대표선수들은 5개월동안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국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번 전국대회 입상자는 경기직종에 따라 오는 2019년 러시아(카잔)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평가전 출전자격이 주어지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송하진 도지사(전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는 전북선수단 참가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 전북 기능인의 우수한 숙련기술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국대회 준비에 매진한 관계자와 선수대표를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김명지 전주시의장, 아시안의회포럼 참석

전주시 정책협업사례 등 알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사진)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회 아시안의회포럼에 대한민국 기초의회 대표로 참석해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간의 정책협업 사례, 의원 연구단체 운영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몽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투발루 등 총9개국의 지방의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C 시대에 지방정부와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의장은 포럼 둘째 날인 26일 성공적인 정책 협업 거버넌스 사례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연간 1,100여 명이 원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정책목표를 선정 · 도출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만들었던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책 협업 사례는 정책을 공론화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합리성, 효율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역 이슈, 주요 현안을 정책화하거나 의원 입법, 의원 발언 등 의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재용 기자

"대통령님 군산조선소 살려주세요"

도의회 의원들, 1인시위 릴레이 양용호 · 이성일 · 최인정 의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전북도의회 양용호, 이성일, 최인정 의원의 1인 시위가 28일 청와대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들 의원들은 오전에는 청와대 앞 광장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상경 시위대는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군산주민 10여명과 함께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현대중공업의 계획대로 지난 7월1일 조선소는 폐쇄되고 말았다며,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청와대까지 찾아간 이유는 새정부가 조선소 폐쇄 대책을 발표했지만, 조선소 재가동 계획이 빠진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용호 의원은 "조선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재가동 약속이 지켜지도록 선박신조 펀드 1조6천억 원의 군산조선소 배정을 촉구"했다.

이성일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가동 계획이 없는 속빈강정"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등이 강조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도 "그동안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가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정부가 공공선 발주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호소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일감부족 등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잠정 폐쇄했고, 협력사 86개중 절반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 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군산을 떠난 상황이다.

/김진성 기자